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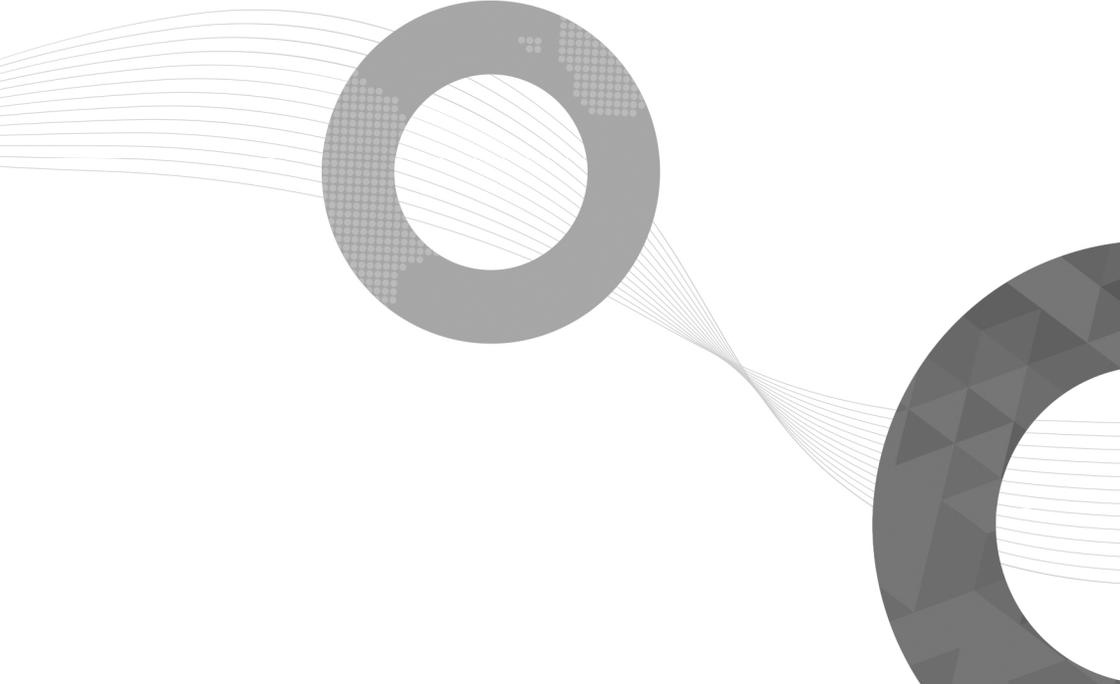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배정호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연구책임자 :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배정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2

---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이기태, 배정호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평화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SBN	978-89-8479-972-1 93340
가격	비매품

---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약 .....	7
I. 서론: 문제의식과 연구방향 .....	9
II.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	15
1.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	17
2.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	29
III. 신남방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67
1.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69
2.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75
IV. 결론: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안 .....	83
1. 전략적 고려사항 .....	85
2. 추진방안 .....	93
참고문헌 .....	1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17

표  
차례

〈표 II-1〉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	54
〈표 II-2〉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순위 .....	60
〈표 II-3〉 인도·태평양 지역 스윙 스테이트의 주요 특성 .....	62
〈표 II-4〉 인도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	64



## 그림 차례

〈그림 II-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	41
〈그림 II-2〉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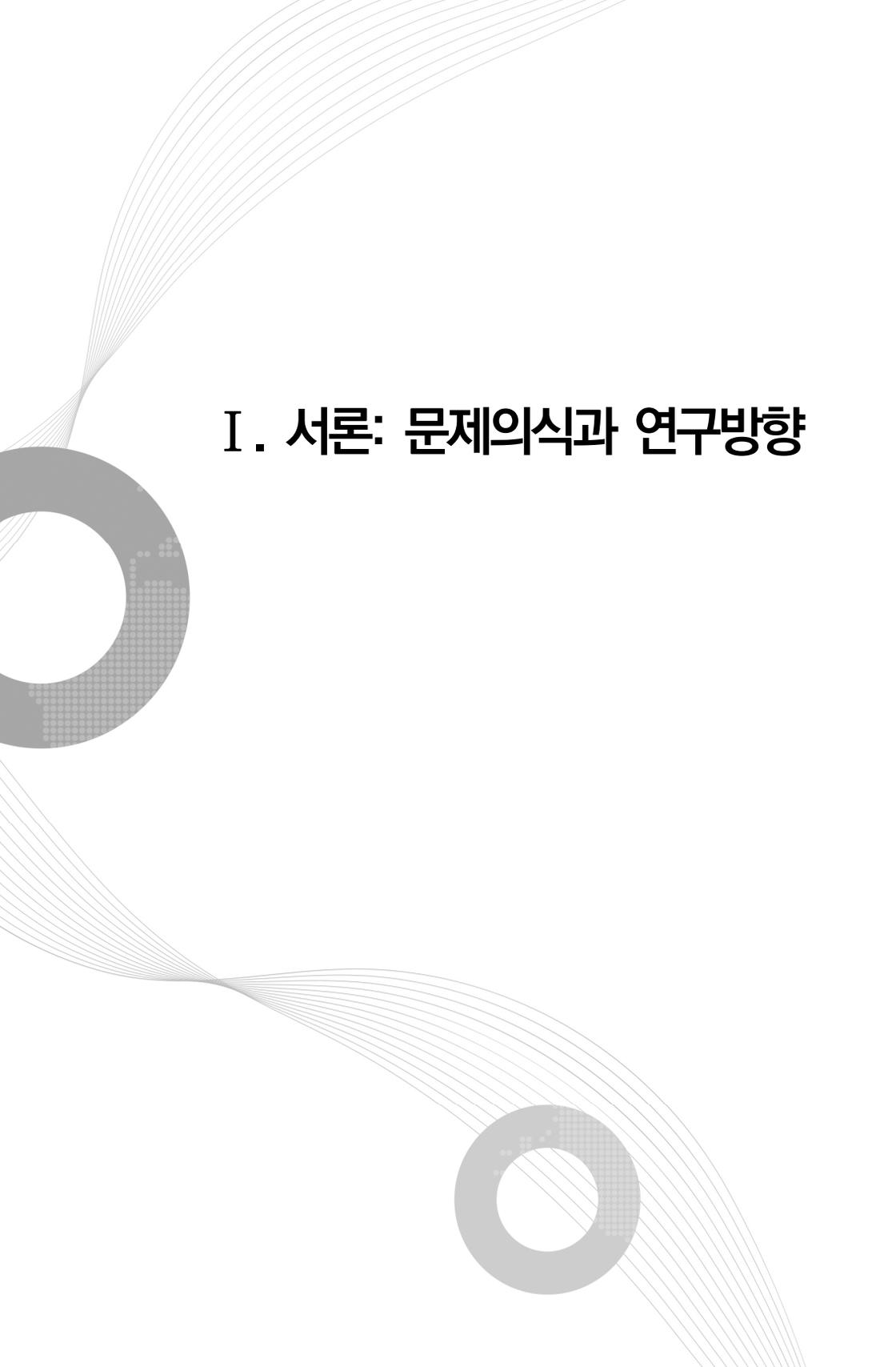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 및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경쟁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각각 전개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보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테이트가 추진하는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을 유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와 국제전략환경 변화 및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 신남방정책, 스윙 스테이트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 left circle is filled with a dense grid of small dots, while the right circle is a solid grey ring.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page.

# I. 서론: 문제의식과 연구방향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은 국력을 기반으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을 지향하며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미중관계를 협력과 견제에서 경쟁과 대립으로 전환시키며 국제전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전략적 경쟁 또는 패권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신흥강국으로 부각되면서 아시아태평양은 인도·태평양으로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일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이 추진되고 있고 인도·태평양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전개되어야 하는 신남방정책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갈등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는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남방정책은 어떤 전략환경의 영향을 받는가?

둘째,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와 관련된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 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까?

셋째, 신남방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이 전개되며 미중의 전

략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역내 국가들은 어떤 입장과 대응을 취하고 있는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는 어떤 입장과 대응을 취하고 있는가?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테이트의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은 무엇인가?

넷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식적인 참가를 표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때 그 동안 인도, 아세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향후 신남방 지역에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협력 분야는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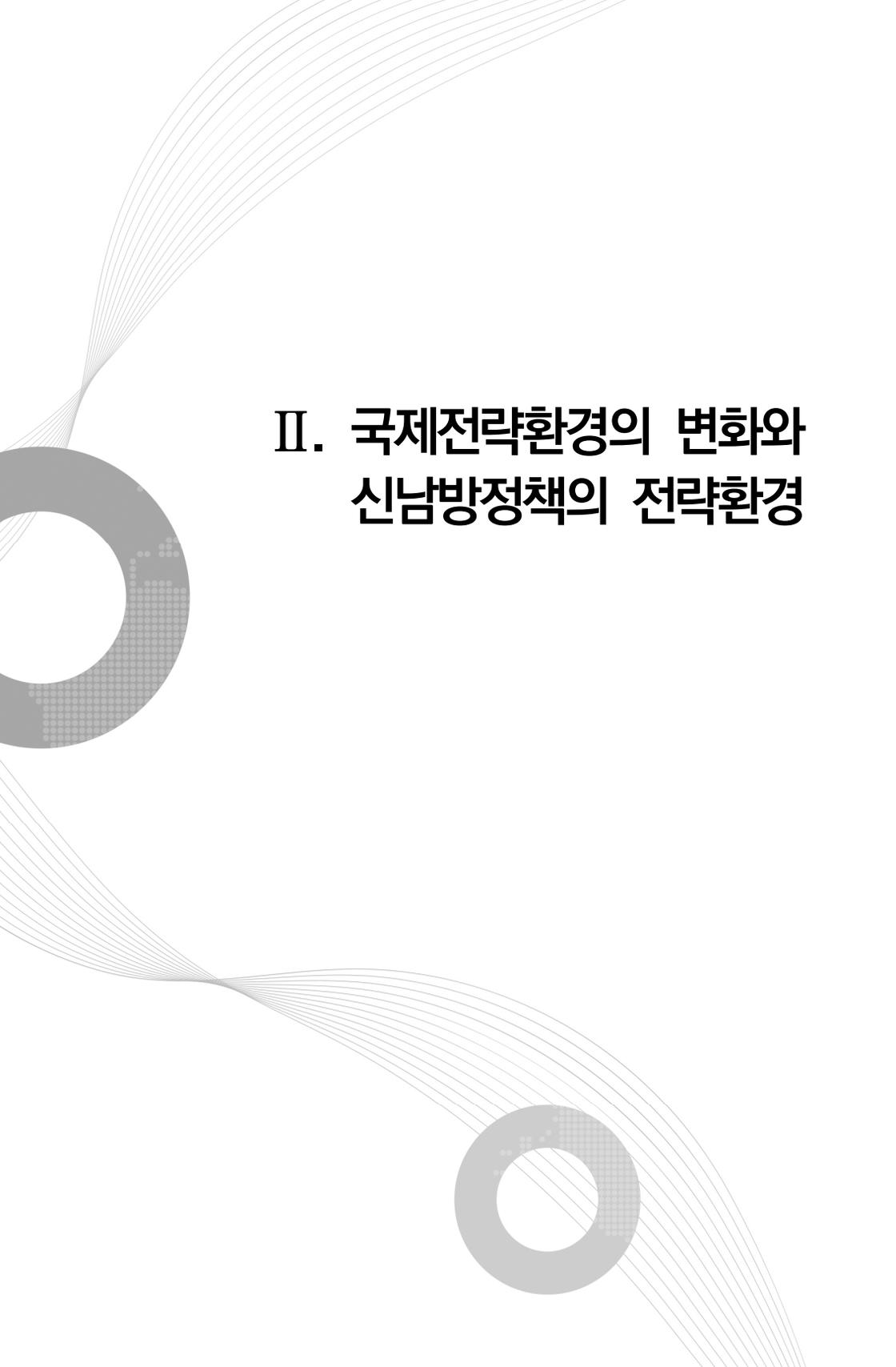
여섯째,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 지역에는 기존에 중국, 일본이 선점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단순히 중국, 일본과 경쟁하기 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와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즉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의 시대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며, 나아가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제1차 자료와 함께 기존 연구 성과물인 제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은 물론, 일본·인도·베트남 등 해외전문가들의 자문도 유효하게 활용하였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consisting of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and one at the bottom right. These circles are filled with a pattern of small, light-colored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with a focus on geometric forms and movement.

## II.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 1.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 가.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 (1) 중국의 부상과 신형대국화 추구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전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마침내 2010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도약은 군사력 등 국력의 증강으로 연계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추구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신형대국화 추구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계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responsible stake holder)’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G2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아울러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 보다, 중국의 가치와 비전 등이 투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려는 의도를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신형대국화를 지향하여 국력의 증강 특히 군사력의 증강을 두드러지게 추구하고면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

1)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서울: 형설출판사, 2015), pp. 79~80.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sup>2)</sup>을 실현하기 위해 대외적 경제영토의 확대와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지향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2013년 9월과 10월에 제시하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진핑 주석은 21세기에 과거 중국의 영광을 구현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하여 2050년까지 ‘슈퍼 파워 차이나(Super power China)’의 건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국력 상승에 따른 신형대국화의 추구는 군사력의 증강에 두드러지게 투영되어 나타났다. 특히 대외 팽창전략의 전개를 위해 해·공군력에 역점을 둔 군사력의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 접근의 저지 및 군사적 활동을 거부하기 위해 소위 ‘접근저지/영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sup>3)</sup> 능력의 증강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미사일·잠수함·사이버공격 능력 등 비대칭전력의 증강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신형무기 개발 및 건조 등 전력증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원거리 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러시아에서 도입한 항공모함 라오닝(5만8천 톤)의 전력화, 2025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 이지스(급)함<sup>4)</sup> 22척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고, KJ-2000 공중조기정보통제기, 장거리 수송기, H-6 공중급유기 등의 증가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핵전력의 강화를 위해 최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

- 
- 2)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2017.10.)’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32차례 강조하였고,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을 시사하였다.
  - 3) 접근저지(Anti Access) 능력은 주로 장거리 능력에 의해 적대자가 작전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역거부(Area Denial) 능력은 단거리 미사일 능력에 의해 작전구역 내에서 적대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A2/AD에 사용되는 무기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위성무기, 방공시스템, 잠수함, 기뢰 등이다. 배경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변영』, p. 76.
  - 4) 현재 중국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고, 16척의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ICBM) DF-31, DF-31A의 배치, DF-41의 전력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JL-2와 이를 탑재하는 ‘진급’ 핵잠수함<sup>5)</sup>의 개발·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sup>6)</sup>

(2)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신형대국화 추구는 미중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2018년 이후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관계의 긴장과 악화의 저류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제2기 오바마(Barack Obama) 정부(2013.1.~2017.1.)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의 요인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로서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해 왔으나, 중국이 주요 국제문제의 책임 이행에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대중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계속하면 중국 국내의 정치적 자유화가 진전되고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로서 국제질서를 함께 유지해 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등장 이후 국내통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중국의 행위가 한층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5) 현재 중국은 6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 전략핵잠수함 7척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진급 잠수함은 현재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6) 국방부, 『2018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9), pp. 14~15;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pp. 76~77.

7) 津上俊哉·森聡, “強硬路線は変わるか 米中「ピック・ディールの可能性」,” 『外交』, vol. 54 (Mar./Apr., 2019), pp. 13~14.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규제의 적용 등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기업을 맹렬하게 추월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정부가 중국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관행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 여론 조작, 선전 선동(propaganda)의 공작 등 영향 공작(influence operation)을 전개한 것에 대해 미국이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미국 사회의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중국을 안전과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도 전환하게 되었다.

오바마 제2기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바마 제2기 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공유자, 경쟁적 협력자 등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의 공세적 행위를 억제하였다.<sup>8)</sup> 중국의 공세적 팽창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제2기 정부는 전통적 동맹인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호동맹 등의 강화를 추진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8) 정구현·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 방안,”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 p. 16.

Asian Nations: ASEAN) 우호국들과의 우호 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구하며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수차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중 관계는 개입 (engagement) 및 협력 관계(cooperation)에서 경쟁 관계(competition)로 재설정되었다. 즉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 전략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은 견제와 압박이 한층 강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의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등으로 인식하며, 중국에 대한 ‘카운터 밸런싱(counter-balancing)’을 구체화하고 있다.<sup>9)</sup>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 의한 중국의 대미투자 규제 강화, 상무부의 수출관리개혁법(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에 따른 기술관리의 강화, 사법부의 중국 스파이 체포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고,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 및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미중 관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향한 신형대국화 추구와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일련의 대중국 압박 조치와 견제 전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갈등과 대립은

9)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울: 책들의 정원, 2019), p. 35.

한층 고조되고 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찰음을 강하게 낸 미중 무역 갈등도 경제적 차원의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의 성향을 내재하며 전개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통상 분야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 즉 새로운 강대국, 현상변경 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전쟁의 성향을 띠며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나. 중일 갈등과 미일동맹의 강화

### (1)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와 전략적 상호의존의 심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본 국내에서 ‘냉전의 산물’인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無用論), ‘오키나와 기지 철수 요구’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회당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가 작성한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21세기를 향한 전망』(1994.8.)에서 ‘미일동맹 보다 UN을 중시’하는 견해 등이 나타나면서 미일동맹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sup>10)</sup>

그러나 미일 양국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미일 전략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시금 강화되기 시작하였다.<sup>11)</sup>

미일동맹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통하

10)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 2006), pp. 199~200.

11) 미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배정호, 위의 책, pp. 203~204.

여 재정의된 후,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연립 내각의 대미 편중정책 등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을 영미동맹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SC 2+2)’, ‘미일 안전보장 고위 사무레벨 협의(Security Consultative Subcommittee: SSC)’, ‘방위협력소위원회(Subcommittee for Defence Cooperation: SDC)’, ‘미일합동위원회’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SC 2+2)’에서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Subcommittee)’을 통하여 ‘지역 차원 및 글로벌 차원의 전략목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는 심화되었고 미일의 상호 전략적 중시의 인식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였고, 미일 군사 협력의 전략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본 주변지역 유사’ 대비 3개 법안, 미군과 영국군을 지원하는 ‘이라크 파병법’(2003.7.26.) 등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2005년 10월 워싱턴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SC 2+2)’에서 ‘글로벌 동맹’을 지향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을 발표한 후, 전력전개거점(Power Projection Hub: PPH)의 역할 수행을 지향한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sup>12)</sup>를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에 따라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워싱턴주의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12)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 수행을 지향한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었다.

육상자위대의 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 지역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사령부가 미국 5공군단이 주둔하는 요코다(横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및 군사적 연대는 지휘·사령탑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sup>13)</sup>

이후 미일동맹은 미국 아시아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서 중일 갈등과 대립, 중국의 군비증강과 ‘접근저지/영역거부(A2/AD)’ 능력 증강, 중국의 신형대국화와 현상변경 추구 등에 대응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발전되었다.

## (2) 중일 갈등에 따른 미일의 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중일관계에는 과거사 문제에 의한 중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내재되어 있고, 아울러 영유권 문제, 지역 패권 경쟁 등 갈등의 불씨도 내포되어 있다. 즉 중일 관계는 감정과 이성이 얽혀져 있는 불안정한 관계이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중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위 인사의 교류 등 적지 않은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개선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중일관계는 협력과 견제,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면서 진전되었고,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중일 정서적 갈등과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긴장과 대립을 연출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sup>14)</sup>에서, 2005년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동중국해 무

13)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pp. 210~215.

14) 2003년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본인 집단 매춘 관광, 동년 10월 29일 시안(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의 교내 파티에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과 이를 비판하는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 사진 등을 계기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9.

인도서(無人島嶼)의 영유권 주장은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을 강하게 자극하여 중국 전역에서 격렬한 반일 시위가 야기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2일 쓰촨(四川)성의 청두(成都)에서 시작된 반일 시위는 불과 10일 만에 중국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동년 4월 16일,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텐진(天津)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일 시위는 1919년 5·4 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이다. 특히 과격했던 상하이의 반일 시위는 5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일본총영사관을 에워싼 채 돌을 던지고 일본 상점과 일제 자동차를 공격하는 등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 우익세력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다. 일본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 명은 2005년 4월 23일, ‘중국타도’와 ‘2008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중국 내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기 싸움’ 속에 일본 정부도 중국을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중일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치달으며 우려할 수준으로 증폭되었는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된 중일 관계는 중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가까스로 진정되었다.<sup>15)</sup> 이후 중일 양국 정부는 정상외교를 전개하며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2006년 10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 원자바오(温家宝)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통 이익

15) 중일 관계는 중국정부가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엄중 경고를 내리고, 나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과 더불어 중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p. 30.

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위한 중일 간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일 관계가 ‘실리적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4월,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 이후 7년 만에 중국 총리로서 도쿄(東京)를 방문하여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였다. 즉,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일한 원자바오 총리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아베 정권을 계승한 후쿠다(福田康夫) 정권에서도 지속되었다.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위해 친중파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듬해 2008년 5월에 일본을 답방하여 5월 7일 도쿄에서 후쿠다-후진타오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후쿠다-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이 합의되었고, 이어 동년 6월 18일에 개최된 중일 양국 실무진 수준의 회담에서는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한다는 기치 아래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졌다. 즉, 중일 양국은 미래지향형 발전을 향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중일 우호적 관계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일 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내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에도 예상치 못하는 수준으로 갈등이 증폭하는 불안정한 관계였다.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내재된 불안정한 중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은 미일동맹 강화로 연계되었다. 2010년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간 충돌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한 2010년, 중국은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새벽에 주중 일본대사를 호출하여 항의하는 등 매우 거칠고 무례하게 대응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대일 수출입 제품의 통관 지연, 일본인 체포 등 원칙과 규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16)</sup>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되었다.<sup>17)</sup>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일본 정부는 대중국 견제전략을 전개하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은 미국과 공동대처를 추진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례적으로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제 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백히 하였다. 2010년 12월 3~10일, 센카쿠제도 방어를 위한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었다. 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의 센카쿠제도 불법 점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비롯하여 이지스함, 항공 타격부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무기 정찰기 등 첨단무기들이 동원되었다.<sup>18)</sup>

16) 희토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는 무역보복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배경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14.

17)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3개 섬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을 명분으로 3개 섬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일본의 센카쿠제도 국유화조치에 대하여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 교류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였고, 중국 국내에서는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규모 만일 시위 등이 전개되었다. 현승수·배정호 외,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92~93.

2014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제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은 중일 갈등과 대립에 대응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일동맹의 전략적 존재를 가시화하였다.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한층 중시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전통적 동맹체제의 강화를 추진하며 대중국 헤징전략을 추구하자,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확대된 전략적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안보전략’ 수립(2013.12.),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2013.12.), ‘집단적 자위권’ 용인(2014.7.),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2015.4.) 등을 실행하였고,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2019년 6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에 명기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혼드는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면서,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초석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초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

18) 배정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pp. 114~115.

## 2.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 (1) 재균형 정책에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전환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아울러 폐쇄적인 동아시아 지역에 대응하는 지역 개념으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에 합의한 뒤, 동년 11월 10일 베트남의 다낭(Da Nang)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의 비전(Indo-Pacific Vision)’을 주제로 연설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법의 지배 및 규칙 기반질서(Rule-based Order), 항행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 태평양사령부(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의 명칭은 2018년 5월에 인도·태평양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PACOM)로 변경되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월터 더글러스(Walter Douglas)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등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상공회의소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어떤 국가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투자계획을 공개하였고, 인도·태평양의 경제 비전으로 디지털 연결성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에너지를 통한 개발과 성장 향상(EDGE), 인프라 거래 지원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즉, 지정학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처음 발표된 지 8개월만에 지경학적 특성이 추가되며 조율된 것이다.<sup>19)</sup>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는 전략으로 발전되어 제시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월터 더글러스 국무부 부차관은 2018년 8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전략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고, 지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꾀하며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1월 13일 아베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기

---

19)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18~19.

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을 17회 언급하였고 그 가운데 6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동년 11월 15일 싱가포르의 아세안-미국 정상회담 연설에서는 중국을 겨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국 그리고 침략주의가 설자리는 없다”고 역설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재균형 정책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정학 중심에서 지정학적 특성을 가미하다가, 마침내 2019년 6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안보(security), 경제(economics),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추진된다.

## (2)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2019.6.)』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특징

2017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건국 이래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하였는데,<sup>20)</sup> 패트릭 샐너헌(Patrick M. Shanahan) 국방장관 대행도 2019년 6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에 수록된 메시지(message)를 통하여 인도·태평양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the Department of Defense’s priority theater)으로 강조하였다.<sup>21)</sup>

20)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p. 4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색일: 2019.11.11.).

21) The Department of Defense,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Р)』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자유(free)’는 타국가의 강압(coercion)으로부터 국가주권의 존중, 국가 내의(at the national level)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 등을 의미한다. ‘개방(open)’은 지역 내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계,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사이버와 우주의 자유, 공정하고 상호적인(reciprocal) 무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sup>22)</sup>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위협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러시아를 ‘재부상한 악성국가(revitalized malign state)’,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적하고 있고, 아울러 테러, 해적,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sup>23)</sup>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고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접근법(whole of a government)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안보(security), 경제(economics),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sup>24)</sup>

넷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된 안보환경 및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운용과

---

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19.11.11.).

22)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4.

23) Indo-Pacific Strategy Report,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24) Indo-Pacific Strategy Report,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협력의 증진을 지향하는 동류국가들(like-minded states), 즉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능력 배양과 외연을 전략적으로 중시하며, ‘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a networked region)’을 추구하고 있다.<sup>25)</sup>

다섯째, 미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언급하면서, 타이완과의 강력한 파트너십(strong partnership)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6)</sup> 즉, 미국은 중국을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고, 타이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1979년 1월 미중 수교 협정이 발효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외교의 근간이 되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sup>27)</sup>

여섯째,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하는데, 미일동맹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로 규정하며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미호동맹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군대의 상호 운용성 증대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9)</sup> 반면, 한미동맹

---

25)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44~45, p. 53.

26)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30~31.

27) 백악관 홈페이지의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대만 국기가 노출되어 있고, 존 볼턴(John Bolton)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5월 13~21일 방미한 대만의 리다웨이(李大維)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을 공식적으로 만났는데, 이는 1979년 1월 1일 미중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가진 미국·대만의 안보책임자의 공식 만남이다. “펜타곤 보고서에 ‘대만=국가’... 미, 중 가장 아픈 곳 찢렸다,” 『중앙일보』, 2019.6.7.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3490896> (검색일: 2019. 11.11.).

28)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22~24.

29)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26.

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차원이 아닌,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만 평가하고 있다.<sup>30)</sup>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201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 보완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정책·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아직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31)</sup>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키스 클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미국 가치에 적대적이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이어서 “한미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였다.<sup>32)</sup>

### (3) 중국에 대한 견제와 헤징(hedging) 전략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유지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그런데 중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R)』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질서를 흔드는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되어 있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세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이다. 최

30)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24.

31) 외교부,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외교부 보도자료, 2018.8.14.

32) 김현아 “중이 인도·태평양지역 위협...한미관계가 경제안보 핵심”, 『문화일보』, 2019.11.7. <[http://www.munhwa.com/news/news\\_print.html?no=2019110701070109314001](http://www.munhwa.com/news/news_print.html?no=2019110701070109314001)> (검색일: 2019.11.11.).

근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의 뉘앙스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보다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Indo-Pacific Initiative)라는 표현을 선호해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인도·태평양의 네트워크화 등을 추구하며 대중국 해징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징 전략은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전략적 연계,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미·일·호 전략적 안보 협력 강화와 인도로의 외연 확대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수송로가 남중국해·말라카 해협·인도양 등을 통과하므로, 미국은 남중국해·말라카 해협·인도양을 미중의 잠정적 대립 지역으로 판단하고, 호주를 거점으로 동남아와 남태평양 전선을 연계시키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및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에 대항하여 미호동맹의 상호운용성 등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동남아 분쟁 시 개입을 위해 호주 다윈(Darwin)의 로버트슨 바락스(Robertson Barracks)에 해병대를 순환시키고 있다. 호주의 다윈 지역은 동남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해전(air/sea battle)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다윈의 미국 해병대(Marine Air Ground Task Force)는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A2/AD)’에 대항하여 공·해전을 펼치는데 전략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sup>33)</sup>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영향

33)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235~237.

력 증대에 대비하여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은 현재 중국과 분쟁중인 국가이거나 잠재적 분쟁국들이다.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해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에 베트남의 해안 경비 교육센터, 필리핀의 국립 연안 감시 센터, 인도네시아의 해양 경찰과 레이더 능력 배양 등에 재정 지원 등을 하였다.

또한 2015년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공식명칭은 ‘아시아 안보회의(Asia Security Council)’에서 발표한 동남아 국가들을 위한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를 위해 미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MSI는 동남아 거점 국가들의 해양 상황 인지 및 정보 교환, 해양 안보 능력의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sup>34)</sup>

이와 같은 미국의 동남아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에는 일본, 호주 등도 참여하고 있다. 동남아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은 주로 비(非)전통안보 의제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수역국과 수용국의 특성,<sup>35)</sup>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축적된 상호운용성과 상호신뢰의 전통안보 영역으로의 투영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업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사업으로도 귀결된다.<sup>36)</sup>

---

34) 수역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이고, 주요 수용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국과의 분쟁국, 중국과의 안보 대립국 등이다.

35) 박재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pp. 243~244.

36) 위의 글, p. 248.

#### (4) 쿼드협력(Quadrilateral cooperation)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안정된 안보환경 및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의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의 연대에 의한 역지력 강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 혹은 Quad)는 ‘비공식 안보협력 네트워크’로,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은 대표적인 소다자주의 네트워크 협력이다.<sup>37)</sup>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인도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견제에 공통의 안보 이해를 가진 일·호·인과 쿼드 협력(Quad 1)을 2007년에 시도하였고, 2017년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개되면서 재차 일·호·인과 쿼드협력(Quad 2)을 가동하고 있다. 즉,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협력(Quad 1)은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연계인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가 인도로 외연을 확장함에 따라 태동되었다. 즉, 미국과 인도의 양자 간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 군사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2007년에 참여함으로써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1)이 시작되었으나, 2007년의 쿼드 협력(Quad 1)은 일본 아베 총리의 갑작

37)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p. 8.

스러운 사임과 더불어 중국 견제에 부담을 느낀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 및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비협조적 입장을 취하면서 실패로 끝났다.<sup>38)</sup>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과 인도 양자 간의 말라바 군사훈련은 지속되었다. 일본은 말라바 군사훈련에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등장하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 등 보편적 가치의 정착과 확산,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의 수호 등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다(〈그림 II-2〉 참조). 아울러, 일본은 2015년부터 말라바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에 이어 인도에서 2014년 5월 만모한 싱에서 나렐드라 모디(Narendra Modi)로 총리가 교체되었고, 호주에서는 2015년 9월 케빈 러드에서 말콤 턴블(Malcolm Turnbull)로 총리가 교체된 후에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2018년 8월에 총리로 등장하면서, 인도와 호주도 중국의 공세적 해상팽창과 군사력 투자를 우려하여 쿼드협력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길에 개최된 도쿄 미일 정상회담(11.6.)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이 발표되었고, 이어 필리핀의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에서 부속 회담 형식으로 ‘4국 관료 회합’(11.12.)이 개최되면서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이 가동되었다.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8)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pp. 238~239.

첫째, 쿼드 협력은 미·일·호·인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변경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기존의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liberal, open, rule-based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이다. 즉, 미·일·호·인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 법의 지배,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이다.

둘째, 쿼드 협력은 기존 미국 중심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rks)’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sup>39)</sup> 왜냐하면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인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면서 인도로 외연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하면서, 인도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sup>40)</sup>

셋째, 인도, 호주 등이 중국 포위 또는 봉쇄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쿼드 협력(Quad 2)을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헤징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을 의식하며 미국의 중국 봉쇄, 미중의 충돌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쿼드 협력(Quad 2)을 군사안보 일변도보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39)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p. 8.  
40) The Department of State,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November 4, 2019), p. 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검색일: 2019.11.11.).

## 나.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1) 중국몽<sup>41)</sup>과 ‘일대일로’

2012년 11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등장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중국굴기(中國崛起)를 지향하며, 신형 대국화를 위한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도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6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계를 신형 대국관계로 제안한 뒤, 9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제시하였고,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후 일대일로 구상은 2014년 3월 제12기 전인대에서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공식 비준되었고, 2015년 3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sup>42)</sup>

일대일로 구상은 국가전략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2018년 12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연설, 2019년 신년사 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으로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그림 II-1> 참조).

41) ‘중국의 꿈(中國夢)’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2017.10.)에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32차례 강조하고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을 시사하였다.

42) 황재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262.

<그림 II-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출처: 김정은, “중국 칭다오 ‘일대일로’ 준비?...도시간 국제협력 강화,” 『뉴데일리』, (2018.12.14).  
 <[http://image.newdaily.co.kr/site/date/img/2018/12/14/2018121400082\\_0.jpg](http://image.newdaily.co.kr/site/date/img/2018/12/14/2018121400082_0.jpg)> (검  
 색일: 2019.10.2.).

## (2) ‘일대일로’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일대일로의 ‘일대(一帶)’는 중국의 중·서부 내륙지방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계하는 ‘육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一路)’는 중국의 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등지를 해로로 연계하여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의 연선(沿線)에 위치하고 있는 70여개국을 세계 인구의 약 64%, 전 세계 GDP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sup>43)</sup>

그러므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플랫폼으로 특징 짓고 국제 공공재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 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43)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310~311.

추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중국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은 일대일로로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되며 아울러 중국의 신형 대국화를 위한 대외적 기반이 된다.<sup>44)</sup>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중국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국익 추구가 최우선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해외투자 및 진출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세계의 공장으로서 생산한 많은 잉여 제품의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기반 시설 등을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수용한 연선 국가들이 중국의 내륙 또는 연안지역으로 연결되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제 회랑’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sup>45)</sup>

넷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연계성을 증시하며, 중국의 물류와 수송을 위해 해운과 철도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파키스탄-중국 원유수송관, 미얀마-중국 원유수송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중국 고속철도 사업 등이 있다.

---

44) 江原規由, “一帶一路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673 (2018), pp. 44~5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11.

45) 윤석준,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 한국해로연구회 편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오름, 2019), p. 197.

다섯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육상 네트워크,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이다. ‘육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의 중·서부 내륙지방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계하며 육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해로를 연계하여 중국의 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육상 네트워크,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sup>46)</sup>

중국은 이와 같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매우 공세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전략은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로’의 프로젝트 추진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로, 즉 해상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해양 대국화 전략이다.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캄보디아(시누아크빌 항), 미얀마(시트웨 항), 방글라데시(치타공 항), 스리랑카(함반토타 항), 파키스탄(과다르 항) 등 인도양 국가들의 주요 항구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들을 전략적 진출의 거점으로 연계·연결하는 소위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II-2〉 참조).<sup>47)</sup>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경학적 차원에서 석유·가스 자원 및 광물 자원 등 수출입 물자를 위한 해상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전략적 핵심 거점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이다. 중국은 ‘채무의 함정(debt trap)’ 외교로 2015년 11월 과다르 항의 운영

46) 江原規由, “一帶一路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673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8), pp. 42~50.

47)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pp. 80~81.

전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동이나 유럽으로부터 석유나 주요 물자를 중국으로 운송이 가능한 전략적 해상경로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도, 중국은 과다르 항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석유가스 등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해외의 정치·경제적 영토의 팽창을 위해 전개되고 있다. 인도양·남중국해·아프리카의 해로를 연결하는 스리랑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의 핵심적 거점인데, 중국은 스리랑카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대가로 함반토다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였다. 즉, 중국은 ‘채무의 함정’ 외교로 함반토다 항구의 장기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및 체제에 편입되기 보다는 하와이로부터 서쪽 태평양을 관리하면서 중국의 비전과 구상이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 및 체제를 형성해 나가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하였다.<sup>48)</sup> 이와 같이 중국은 신형 대국화를 지향하고 해외의 정치경제적 영토의 팽창을 위해 지정학적 차원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 목걸이 전략’에 따라 건설된 항만 시설들은 필요시에 지정학적 또는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즉,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목적의 해외 팽창을 위해 추진되는 전략이며, 정치경제적 영토의 해외 팽창을 위한 전략이다.

---

48)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2015), pp. 79~80.

<그림 II-2>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출처: 안용현, “시진핑 ‘진주목걸이’ 외교전략,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와 충돌,” 『조선일보』, 2014.9.17.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4ugZDidX&id=4657432>> (검색일: 2019.10.10.).

### (3) 추진과 한계

중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운명공동체, 이익공동체, 의리관 등 중국식 가치를 담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 연선 국가들은 물론 G7 국가인 이탈리아도 참여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약 126개 국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고, ‘제2회 일대일로 포럼’(2019.4.25.~27.)에서만 총 640여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력이 체결되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

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 가운데 약 40개 국가 165개 은행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중국식 가치, 중국식 발전 모델 등의 전파와 함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대외전략과 해상 팽창 추구, 미중의 전략적 경쟁, 중국을 현상변경국가로 간주하는 미국의 인식 등으로 인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후유증 등은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와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재정력 등 자국의 문제로 인한 한계뿐 아니라, 부작용, 후유증 등으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와 저항에 부딪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반응 및 태도는 다음과 같다.

미일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은 1차 아베 내각시절부터 중국의 공세적 해상 팽창주의를 경계하였다. 일본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즉시, 미국(하와이)-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그림 II-2> 참조)을 제시하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협력(Quad 2)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49)</sup> 즉,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경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인도 및 동남아 중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49) 아베 신조는 제2차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 2012년 12월 27일 국제NPO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의 웹사이트에 "Asia Security Diamond"라는 소논문을 게재하여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다. 鈴木美勝, 『日本の戰略外交』(東京: 筑摩書房, 2017), p. 138.

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 지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인도양 및 벵골 만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에 매우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할 것을 인도에 권유하며 접근하고 있지만,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은 인도에게 일대일로에 참여하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의 명칭을 재정의 할 수 있다며 인도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 중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중국만 이득을 본다고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인도의 영토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Pakistan-occupied Kashmir)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국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로 인해 채무가 많아 IMF에 구제금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채무로 인해 전략적 거점인 파키스탄의 과다 르 항이 중국에게 운영 전권이 양도된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즉,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채무의 함정’ 외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베트남은 통일 직후에 중국과 전쟁을 치렀고 현재는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안보적 관점에서 경계심이 강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 인력, 물자를 사용하고, 게다가 인프라 건설 등의 완성 후에는 중국 노동자들이 그대로 거주하여 차이나타운을 구축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제1의 중국 교역국이다. 말레이시

아는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중국으로 연계되는 동해안철도사업(East Coast Rail Link: ECRL), 항구개발(관탄(Kuantan) 지역), 항구 네트워크(말라카 게이트웨이(Melaka/Malacca Gateway) 지역), 말레이시아-중국 산업단지(Malaysia-China Kuantan Industrial Park: MCKIP) 프로젝트 등이 중국의 투자와 중국 건설 회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부채의 우려 때문에 무산될 뻔하다가 재검토를 거쳐 축소·재개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투자대상인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악화로 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 처해지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즉, 중국의 투자가 많아질수록 투자 대상국의 부채는 증가하고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risk)는 커져갔다. 그 결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경계나 비판도 높아졌다.

특히 인도,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이 ‘채무의 함정’에 빠져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채무 불이행 대가로 중국에게 전략적 거점의 운용 전권을 양도하게 된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즉, 인도,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채무의 함정’ 외교를 매우 경계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50) 유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도전과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 『외교』 제129호 (2019. 4), pp. 60~61.

그러므로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조달 가능한 자금 간에는 한해 최대 5천억 달러 수준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sup>51)</sup> 즉,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자금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의 주도아래 중국 자본, 중국 자재, 중국 노동자 등에 의해 추진된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자국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는 기대와 달리 미약하고, 오히려 해당국들은 고금리에 의한 부채 증가로 ‘채무의 함정’에 빠져 중국으로의 광물 자원 송출, 중국의 광산 장기운영권 소유, 중국의 주요 전략적 항구의 장기 운영권 소유와 군사안보 주권의 훼손, 중국 노동자의 불법 이주와 차이나타운 건설 등 정치·경제·안보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sup>52)</sup>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인프라 건설이 대표적 사례인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불만과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 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 (1) 전략구상의 진전과 배경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총리가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VI: TICAD VI)’에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게 개방된

51) 이기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한계,” 통일연구원 국제 관련 정책자문회의 (2019.5.10.) 발제문.

52) 위의 글.

해양질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주창하였다.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외교전략 구상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인도·태평양을 중시하는 전략적 구상은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2006.11.)와 ‘두 바다의 교류(二つ海の交わり)’(2007.8.) 등에서 나타났다.

‘자유와 번영의 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권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외교, 인도 중시의 전략외교를 제시하였는데, 이후 일본의 대인도 전략외교가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일본-인도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Strategic Global Partnership)’이 형성되었다.

‘두 바다의 교류’에서는 해양국가로서 해상수송로(Sea Lane) 안전의 사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 인도가 전략적 결합을 하고 여기에 미국과 호주가 참가하면, 미·일·호·인의 결합에 의한 ‘확대 아시아’는 인도·태평양에서 광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계와 결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번영의 호’와 ‘두 바다의 교류’ 전략구상은 제1차 아베 내각의 아베 총리가 건강문제로 2007년 9월에 갑자기 퇴진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제1차 아베 정부의 퇴진에 의해 사장되었다.

제2차 아베 정부가 등장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와 ‘두 바다의 교류’의 전략적 구상도 다시 맥을 잇게 되었다. 예컨대, ‘자유와 번영의 호’의 중국 견제와 해양의 안전 확보, ‘두 바다의 교류’의 인도·태평양을 중시하는 전략적 구상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의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2012.12.), ‘아세안 외교 5원칙’(2013.1.) 등에 투영되어 전략적 맥을 이었다.

제2차 아베 내각의 출범 직전인 2012년 12월 27일 아베 총리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도양 등으로의 공세적 해상팽창에 대응하여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계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고,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에는 아베 총리의 첫 해외 순방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법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해양’ 등을 강조하는 ‘아세안 외교 5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어 동년 2월, 아베 총리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공공재로서의 자유로운 해양’을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 각국들과 함께 노력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4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구촌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으며 글로벌 활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마침내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와 아베는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부담을 느끼는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6일, 일본-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strategy)’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vision)'으로 수정해서 발표하였다. 수정의 이유는 '전략'이란 표현이 중국을 견제하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주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다. 즉, 아세안 국가들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으로 수정 표현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3)</sup>

아베 총리는 2019년 1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인도·태평양에 관해 언급하면서, 전략 대신 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을 모든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하였다.<sup>54)</sup>

## (2) 전략의 주요 목적과 내용

일본은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활력의 핵심으로 21세기 세계성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도·태평양의 해양질서는 자연재해, 해적, 테러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에 의해 불안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전략적 목적은 21세기 세계성장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

53) 『日本經濟新聞』, 2018.11.13.

54) 第百九十八回国会における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90128siseishoushi.html](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90128siseishoushi.html)〉 (검색일: 2019.11.11.).

에서 공세적 팽창을 추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진주목걸이 전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어떠한 국가도 분리할 수 없는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 공공재’로 삼기 위한 것이다.<sup>55)</sup>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은 『외교청서(外交靑書)』 및 『개발협력백서(開發協力白書)』 등에 제시된 <표 II-1>과 같다. 즉,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게 개방된 태평양과 인도양을 일체화로 파악하여 연결시키고, 이를 매개로 ‘성장이 빠른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결합시킴으로써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구촌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전략구상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의 전략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동아프리카와 역사적 연계가 강한 인도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가 추진하는 동방정책(Act East)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sup>56)</sup>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연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스러운 동맹 수준(natural ally)<sup>57)</sup>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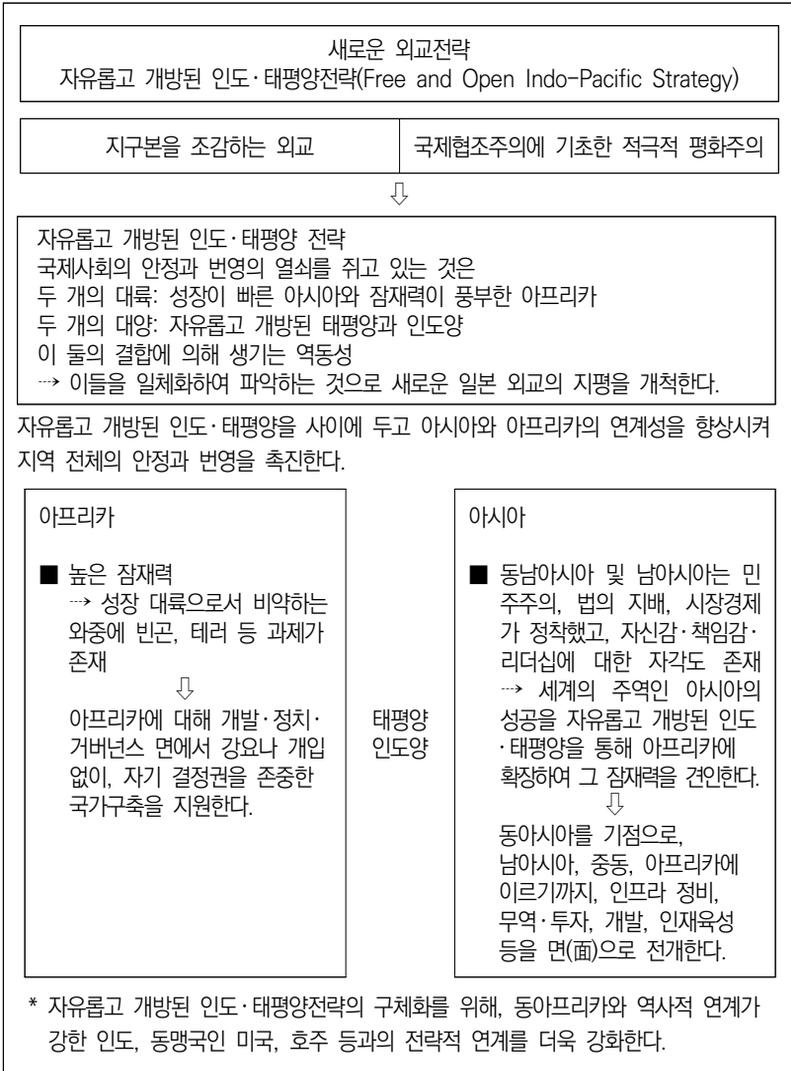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의 가동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에 대한 헤징 전략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55) 外務省, 『外交靑書2018』(東京: 日経印刷, 2018), p. 13; 外務省, 『2017年版 開發協力白書』(東京: 日経印刷, 2018), p. 2.

56) 外務省, 『外交靑書2018』, p. 13.

57) 2018년 11월 13일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된 정책자문회의에서 연세대학교 백우열 교수는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natural ally’로 특징지었다.

<표 II-1>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출처: 外務省, 『外交青書2017』, p. 16.

### (3) 전략의 특징과 함의

#### (가) 정부개발원조(ODA)의 전략적 활용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형 대국화를 지향하며 공세적 팽창주의 성향의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인식하며 견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 제품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중국을 의식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정치외교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표현을 수정·발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정부개발원조(또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사무국이 아닌 외무성 국제협력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ODA 지원 사업을 보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아세안 지역의 ‘동서경제회랑’과 ‘남부경제회랑’ 개발 지원 사업, 인도의 ‘델리-뭄바이 간 산업대동맥구상(Dehli-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 DMIC)’이나 ‘첸나이·벵골 산업회랑(Chennai-Bengal Industrial Corridor: CBIC)’ 지원 사업, ‘범이 지배하는 해양’의 확보를 위한 해상보안능력

의 구축 지원사업, 해상보안능력의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 일본기업 등 외국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와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sup>58)</sup>

일본은 이와 같은 ODA 지원 사업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즉,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일본의 국제협력사업 전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일본과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 증대 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자극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다.<sup>59)</sup>

#### (나) 미일동맹 강화와 쿼드협력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미일 간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 수용되었다.<sup>60)</sup> 그리고 그 해 11월 6일 트럼프-아베 간 도쿄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으로 합의되면서 미일동맹 강화로 연계되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발전하면서,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의 가동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R)』에서는 미일동맹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하며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

58) 外務省, 『2017年版 開發協力白書』, pp. 3~4.

59)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50.

60) 조양현,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외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국립외교원, 2018), p. 9.

일본은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집단 자위권 해석 개헌,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 재개정 등을 통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미일동맹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의해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미일동맹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 (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본·인도의 전략적 연대의 강화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발상의 진전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은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 직후부터 중국의 공세적 해상 팽창주의를 경계해왔다. 그리고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직접적인 발상의 계기도 팽창을 전략적 속성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전개하자,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을 우려하여 일대일로에 대한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sup>61)</sup> 즉, 일본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기업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전술적 변화인 일대일로 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재계가 중국의 일대일로는 ‘구상’ 수준에서 ‘실무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61)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48~349.

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62)</sup> 일본의 참가는 향후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및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조건 아래, 중국기업과 연대하여 제3국 시장의 에너지·환경, 전력 인프라, 유라시아 물류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는 기업 간 협력 수준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정경 분리의 전술적 대응 수준의 참여이다.<sup>63)</sup>

둘째, 일본의 일대일로 참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따른 리스크 극복 등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대일로에 참가를 이용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공간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leverage) 확보 등 전략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일대일로 참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외 팽창과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견제 전략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일본의 대중 협력 전략도 중국 견제 및 경쟁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sup>64)</sup>

따라서 일본은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의 일원인 인도를 중시하며 대인도 전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도가 핵보

62) 세계성장 중심의 변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의 일본 재계를 향한 끈질긴 설득과 요청, 일본 재계의 아베 총리 등 정계를 향한 '일대일로' 참가 요청 등으로 일본의 '일대일로' 참가가 이루어졌다.

63) 江原規由, “一帶一路の現段階と日本,” p. 44; “중일 연합군이 몰려온다…한, 제3국 시장 힘겨운 전쟁,” 『아시아경제』, 2018.11.06. <<http://www.asiac.co.kr/news/view.htm?idxno=2018110614070097627>> (검색일: 2019.11.11.); 장용석, “아베, 중 ‘일대일로’에 조건부 협력 의사 표명,” 『뉴스1』 <[http://news1.kr/articles/artic\\_print.php?article\\_id=3013492](http://news1.kr/articles/artic_print.php?article_id=3013492)> (검색일: 2019.11.11.).

64) Mataka Kamiya, “Cooperative Strategy to Realize ‘Competitive Strategy’: The composite structure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Vision),” *Security Studies*, Vol.101 No.2 (April 2019), p. 58.

유국으로 신흥 경제 강국이고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대치중이며, 게다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과 전략 핵잠수함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도 안보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다.<sup>65)</sup>

그러므로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연대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5월에 출범한 모디(Narendra Modi) 정부가 동향 정책(Look East)을 동방 정책(Act East)으로 전환한 뒤, 모디 총리는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의 대인도 전략 외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 결과 일본과 인도의 연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sup>66)</sup>

## 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의 한계와 스윙 스테이트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순위는 <표 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순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정치를 펼치며, 초강대국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에 맞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65)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43.

66) 위의 글, pp. 343~345.

<표 II-2>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순위

현재의 영향력		10년 후 영향력	
국가	퍼센트(%)	국가	퍼센트(%)
중국	42.99%	중국	48.99%
미국	24.08%	미국	15.28%
일본	10.44%	일본	8.93%
인도	1.18%	인도	2.12%
러시아	0.58%	유럽연합	1.01%
한국	0.48%	한국	0.53%

출처: 정구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결정 요인 연구: 민주주의 효과성의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집 2호(2019), p. 119.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국력에 상응하는 자국의 힘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대로 투영시키기에는 제한적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전략적 경쟁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제한적으로 협력하며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및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의 상당수 국가들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정치 개입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등을 의식하여 미국 지지의 선택 강요에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과 같은 대중국 견제 전략의 참여에도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의 상당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제한적 협력을 하며 경계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인도,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의 지역 강국들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베트남은 국경분쟁 또는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중국의 공세적 해외 팽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의 투자, 지원 등으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적 관계를 급속하게 진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일대일로의 채무 함정의 외교 등을 비판하며, 중국의 공세적 팽창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 베트남,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한 편이다. 이 같은 상호의존적인 불안정한 관계는 중국-미얀마 관계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미얀마 관계는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에 의해 외형상 안정적 관계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적지 않은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sup>67)</sup>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요컨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힘을 투영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으며 부상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이 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질서와 주요 문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라 불리는 국가 또는 국가군이 있다.

현재 이들 국가 또는 국가군은 인도·태평양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의 국제질서 및 주요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되고 있다.<sup>68)</sup>

인도·태평양 지역의 스윙 스테이트의 주요 특성은 <표 II-3>과 같

67)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ステーツ,”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5), p. 7.

68)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19~320.

다. 즉, 현재 스윙 스테이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만, 향후 국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지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국가 또는 국가군이다.

현재, 이들 스윙 스테이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스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가치는 점증하고 있다.

<표 II-3> 인도·태평양 지역 스윙 스테이트의 주요 특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스로 국제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일정의 국력(경제규모 및 군사력)을 가진 국가 또는 국가군</li> <li>(2) 향후 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 또는 국가군. 즉, 경제성장의 여지가 큰 국가 또는 국가군</li> <li>(3) 중요한 지리적 위치(전략적 균형)에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li> <li>(4) 자국의 지역적·국가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 즉,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li> <li>(5) 아직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 또는 국가군</li> </ul> |
|--|

출처: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ステーツ,”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5), p. 8.

일본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주요한 스윙 스테이트로서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세안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얀마도 민주화가 진전되면 스윙 스테이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국익에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세안 등에 대한 전략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도 ‘해양실크로드’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 및 국제문제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세안 등 주요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중시되는 국가는 단연 인도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GDP가 세계 7위이고,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이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인도의 급격한 부상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개념과 공간이 등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도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며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경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정치·경제·안전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4년 5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인도, 일본과 인도, 미국·일본·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인도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인 말라바 훈련에 일본이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아울러 미국·일본·인도는 2017년 7월 벵골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을 펼치는 등 쿼드 협력(Quad 2)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인도에 매년 3,000억 엔 이상의 차관을 포함하는 ODA를 전략적으로 제공하며 일본·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견제차원에서 미국·일본·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 국민들도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이며 경계하고 있다(〈표 II-4〉참조).

<표 II-4> 인도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질문		우호적(%)	비우호적(%)
중국에 대한 인식		26%	41%
중국의 국력 성장에 대한 인식	군사력	16%	56%
	경제	20%	51%

출처: 퓨리서치. <<http://www.pewresearch.org/global/2017/11/15/India-and-the-world>> (검색일: 2019.1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중국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 즉, 중국은 인도에게 있어 제1의 무역파트너이고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인도양·남아시아에서 세력 확장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며 안정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대중국 견제전략 관점에서 인도의 부상을 전략적으로 환영하지만, 인도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삼가하고 있다. 즉,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과 중국 견제차원에서 인도를 매우 전략적으로 중시하며 동맹 수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신뢰는 삼가하고 있다.

일본의 스윙 스테이트로서 인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sup>69)</sup>

첫째,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인도의 대외정책이 비동맹주의(policy of non-alignment)와 균형주의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서서히 전환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sup>70)</sup> 게다가 오늘날 국제정세가 미중의 전략적 경쟁 등으로 불투명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도는 미중과의 전략적 균형관계와 ‘전략적 자율(Strategic Autonomy)’의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69)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ステーツ,” pp. 9~14.

7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23.

즉, 인도는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균형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용하고,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에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대응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중국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및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등 전략적 거점의 개발을 비롯하여 해양력 증강을 자국의 해양안보에 대한 중국의 침해로 인식하고 있고, 2017년 국경지역인 도클람에서의 인도군과 중국군의 대치 등으로 중국을 경계하고 있지만, 글로벌 이슈에서 적지 않게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71)</sup> 따라서 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 추구’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참가에는 신중하다. 즉, 인도와 중국 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의 안보협력,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미국·일본·인도의 3자 전략 협력이 진전된다고 해도, 인도는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반중연합 참가에는 매우 신중하게 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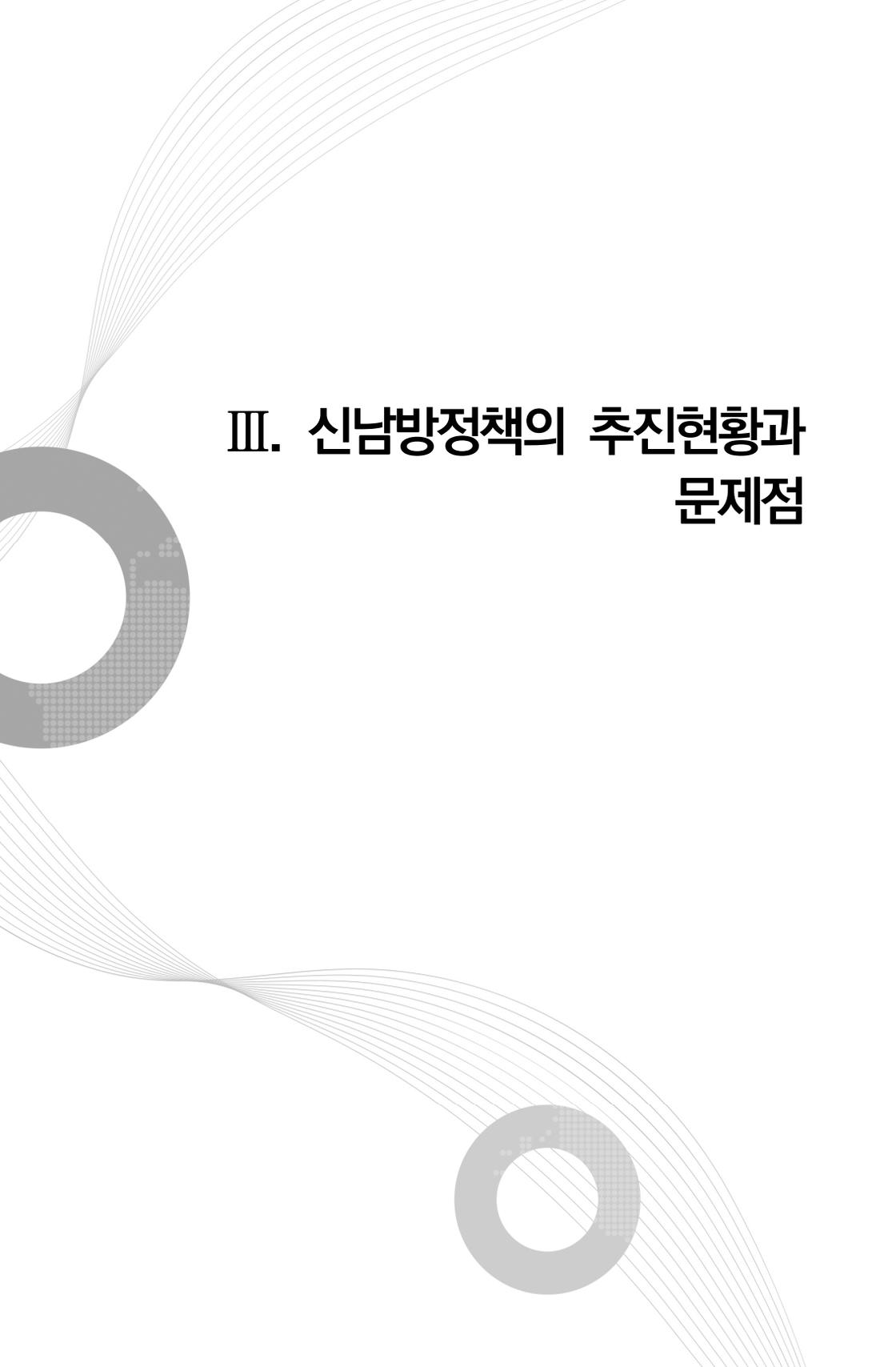
셋째, 인도의 국익에 대한 관념은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 관념보다 오히려 중국의 국익 관념에 가깝다. 더욱이 인도와 중국 모두 ‘주권’ 문제에 유사하게 민감하고,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주도의 국제시스템과 선진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다.<sup>72)</sup>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세안도 인도처럼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된 지지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전략적 자율성과 미중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호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전략적 안보연대를 강화하며 쿼드 협력(Quad 2)의 한 축을 담당하

71)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 2019-13K』 (2019.8.9.), pp. 2~4.

72)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24.

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 동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one at the bottom center.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 Ⅲ. 신남방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 1.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재인 정부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과의 화해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정책의 명칭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불린 대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외교 및 경제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신남방정책도 이전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중에서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외교 다변화를 포함한 외교의 외연 확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안보 전략 측면에서 주변 4국과의 협력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외교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은 국가안보전략에 언급된 신남방정책에 관한 내용이다.<sup>73)</sup>

첫째, 아세안, 인도 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둘째,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상생번영 공동체는 호혜 적

73)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8), pp. 91~92.

경제협력을 통한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평화 공동체는 안보협력을 통한 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신남방 국가들과 북핵 문제는 물론 교역,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신(新)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지형을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 다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남방정책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설정하고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신남방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까지 한국에게 2차적 관계밖에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외부를 향한 경제정책의 측면이다. 2017년 사드(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제재를 교훈으로 외부와의 경제관계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정책에 있어 재균형의 측면이다. 지금까지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강대국에만 의존하는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1.5배 수준의 GDP에 달하며 또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매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정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4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아세안과의 외교·경제 관계

를 확대하려고 한다. 셋째, 지역 협력 혹은 지역 전략의 측면이다. 다자간 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특정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피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대국 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목표로 했지만 항구적인 입장을 얻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대응에 필요한 정책이다. 당연하게도 기존에 한국이 중시한 주변 4강 외교는 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이익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외교를 단순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외교로 한정한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비롯한 외교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74)</sup>

이처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주요 목표는 동남아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의 관계처럼 격상시키는 것이다. 단, 4강 외교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균형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교정책의 다변화와 함께 경제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전략적 방향성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경제발전 원조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방’ 지역은 지리적 위치에 더해 역내 국가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이며 부상하는 지역세계(emerging world)를 의미한다.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먼저 양자관계의 강화에 있다.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회원국들과 개별 양자관계를 격상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

74) 이재현은 한국에게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과 국가가 가지는 기회요인을 미래지향, 외교다변화, 경제협력, 외교·안보적 중요성, 사회·문화적 의미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통일한국』, 제416호 (2018년 8월호), p. 12.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경제적 발전이 예상되는 주요 개발협력국(emerging economies)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 연계성 강화이다. 아세안+3, EAS,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등의 지역 내 다자 포럼에서 지역 제도 및 기구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아세안과 관계를 격상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개방되고 투명하고, 포용적 지역 구도를 지지 및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

셋째, 아세안-한국 간 미래공유 공동체 건설이다. 아세안과 한국은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아세안 공동체의 3가지 축(Pillars)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경제(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social and cultural community)이다. 무엇보다 아세안과 한국은 이러한 공동체를 사람 중심(people-centered) 혹은 사람을 우선하는 공동체(people first community)로서 협력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전제로 한다. 평화와 안보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그 동안 아세안의 통합 노력으로 수십 년 간 평화와 안정을 향유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는 새로운 위협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핵무기, 영토분쟁, 인종/민족 분쟁, 테러, 종교적 탄압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평화 구축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역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에 아세안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상생번영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생을 누리 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국과 신남방국가들이 무역, 투자, 공적원조 등 모든 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며, 그러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2020년까지 무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을 통해 아세안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ODA가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투자가 아세안의 산업화를 이끌고 아세안과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무역 증가로 이어지는 투자를 통한 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16가지 정책을 3P, 즉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정책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sup>75)</sup>

먼저 ‘사람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이다.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한국 방문 관광객을 신남방 국가로 다변 화시켜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둘째, 신남방 지역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이다. 문화교류 거점을 확충하고, 문화 ODA 사업, 아세안 지역의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대아세안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셋째,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 역량의 강화이다.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넷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한다. 신남방 지역의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

75) 이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main.do>) 참조.

대한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를 증진한다. 다섯째,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이다. 신남방 지역 노동자들의 한국 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이다. 여섯째,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이다.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이다.

‘상생번영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아세안 역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이다. 둘째,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이다. 우리기업의 신남방 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이다. 넷째,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이다.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 간 4차 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이다. 다섯째,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이다. 각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신남방 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교류 활성화이다.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이 있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이다. 셋째,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이다.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 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이다. 넷째, 테러·사이버·해양안보이다.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다섯째,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이다.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이다.

## 2.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가. 추진 현황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형성이 제안되었고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 추진이 포함되었다.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를 통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표명하였다.

2018년 7월 6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었고, 8월 28일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 파견자가 참여하는 ‘신남방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위원장은 경제보좌관, 위원으로는 외교·산업·기재·행안부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1월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표성과 사업 발표 및 3P 공동체별 목표 달성을 위한 16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확정

하였다. 또한 2018년말에는 기존 아세안과의 다자협의 채널 기능에서 신남방정책 현장에서 총괄 및 조정의 거점공관으로 주아세안 대표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2019년 1월 24일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민관 단체가 참여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신남방진출 지원 협의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지원으로 출범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 간 협업 확대 및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며,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지역 시장 개척 지원과 무역·서비스 분야 진출 과제 발굴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아세안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즉, 신남방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메콩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아세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과의 미래 청사진으로 3가지 공동변영(경험 공유, 지속가능,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험 공유 변영은 한강의 기적과 같은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그 중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KOICA)을 중심으로 메콩 국가의 농촌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촌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변영은 메콩강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변영은 도로, 교량,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상호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것이다.<sup>76)</sup>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확대, 비전통안보 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 증대가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대상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우선 설정하였다. 이것은 이들 국가와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연 7% 정도로 세계 1위이며 2위는 중국, 3위는 아세안 지역이다. 이미 발전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성장률이 모두 7~8% 정도 수준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신남방정책에서 3P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람(People)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 및 협력 행사 등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관광 및 교육 등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상호 방문객은 연간 10% 내외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60만 명으로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에 따른 관심 고조로 이 지역 출신 유학생이 2014년 7,580명에서 2018년 3만 2,574명으로 최근 5년 간 4.3배 급증하였다.

다음으로 상생번영(Prosperity)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및 경험 전수 등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신남방과의 상호교역액 및 수주비중이 확대되었다. 상호교역액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2018년 한국-아세안 상호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교역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76) 김경숙,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프』, 147호 (2019.9.18.), pp. 1~2.

범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 아세안은 중동을 제치고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128억 2,000만 달러, 39.9%)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평화(Peace)와 관련해서 신남방 국가들과 활발한 정상 외교를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외교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및 아세안 정상순방 계획을 견실하게 이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전에 대통령의 아세안 10개 회원국 순방을 천명하였고,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방문을 마치면서 이를 실천하였다.<sup>77)</sup>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아세안 차원의 성명 발표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 강화에 힘썼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초청하였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정상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와 57개 중점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 및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sup>78)</sup>

첫째,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기반을

77)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싱가포르, 인도, 2018년 11월 싱가포르, 2019년 3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2019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방문하였다.

78)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2019.8.14.), pp. 4~6.

구축하였고,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 노력(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16개 관련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였다. 비록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특별위원회 형태로 정부 관련 부처의 신남방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은 신남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외교부 내에 대아세안 협력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하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아세안 회원국 주재 10개 외교공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점은 신남방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외교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아세안 및 인도와 양자차원의 외교 협력, 특히 정상 간 교류가 강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파견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하였고 모디 총리도 2019년 2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인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상 레벨의 외교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3개국 방문 이래 2019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방문을 마치면서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 간 정상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셋째,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기여하였다. 향후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같은 북한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한국과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

넷째, 신남방정책은 대외경제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미중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새로운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이 한국외교에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는 미중 양 강대국이 상호 대립하는 지역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포용적(inclusive) 지역질서 형성을 위해 독자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활동공간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제적 외교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 나. 문제점

하지만 문제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문제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이 베트남에 편중된 나머지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반한 감정의 상승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한 투자액은 2014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8년 1~9월 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3,312 건 중 60%를 차지하는 1,982건이 베트남

대상이었다. 또한 이 기간 중 베트남에는 24억 7,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 전체의 53%에 해당한다. 인적 교류에서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207만 명 중 한국인은 348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241만 명)와 비교해서 44% 증가한 숫자이며 아세안 10개국 전체 한국인 관광객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베트남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분야를 발굴해서 확대하는 등 면밀한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작은 국가이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한국 붐’을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3P,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규범외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현의 형태가 기존의 외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공동체를 이야기 하지만 대기업과 자본, 시장통합의 논리이고 발전 격차와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성장동력 즉 아세안을 시장으로만 인식하는 시장 중심적 접근이 신남방정책을 대표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에서도 시장논리에 압도당한 형국이며, 정치안보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미중 간 갈등, 역내 영토분쟁 등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아세안이 형성시켜온 규범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가치만을 주장하면서 아세안과 인도가 소중히 지켜나가려는 규범과 가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sup>7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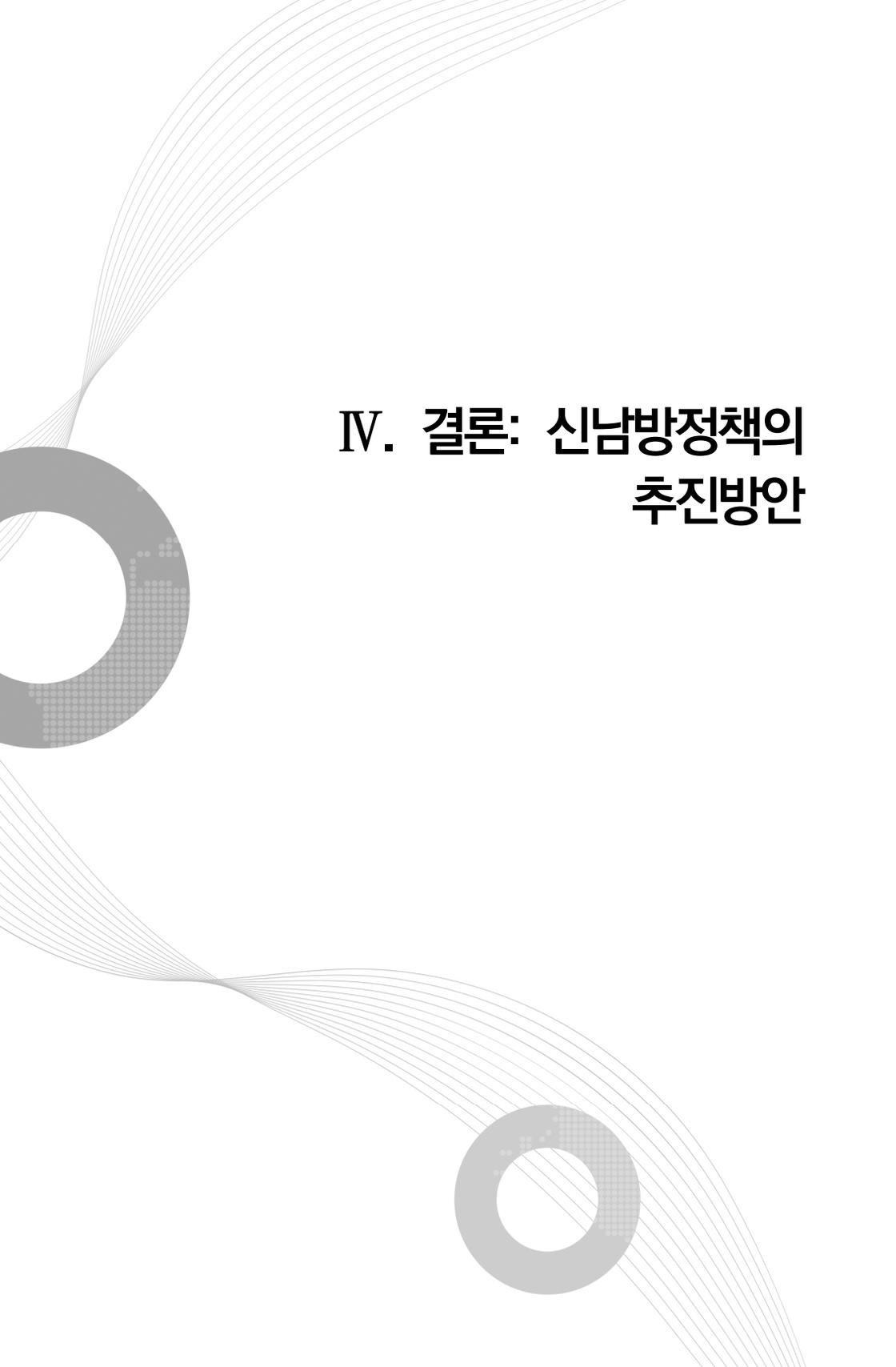
---

79) 김형중,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동남아학회 토론회(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발제문.

셋째,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외교’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3가지 핵심 키워드(사람, 상생변영, 평화)가 정부 수준의 정책과 사업영역에 머물러 있다. 향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아세안 시민사회에서 3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80)</sup> 특히 각각의 이슈와 지역 전문가, 지역 협력 및 다자 협력 전문가들과 정부 사이의 소통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에 신남방지역 전문가 및 관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과 대인도 정책과 연결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

80) 최경희, “신남방정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세안 공동체,” 한국동남아학회 토론회(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발제문.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one at the bottom center.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text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page.

## IV. 결론: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안



## 1. 전략적 고려사항

### 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

미국은 미일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초석으로 평가하며 일본을 중시하고 있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며 해양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면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탈퇴하였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후퇴, 동맹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도록 하였다.

일본 역시 미국의 통상압박, 미일 동맹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였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에 의해 초래된 미일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즉,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를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아베 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으로 합의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되었고, 미일동맹의 강화로 연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일동맹의 강화와 선순환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미일동맹과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도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전술적 차원에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

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기업 간의 협력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는 한국에게 적지 않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의 ‘채무의 함정’ 외교와 파키스탄·스리랑카, 아세안 개도국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과 경계, 중국의 공세적 팽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의 경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일본의 간접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는 일본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용한 경제적 공간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leverage) 확보 등의 전략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sup>81)</sup>

그러므로 한국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제로섬(zero sum)적 관계로만 판단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아울러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양자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지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sup>82)</sup>

## 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경학적 특성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국은 공세적 대외정책과 해상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현상변경국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기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지정학

81)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49.

82) 위의 글, p. 352.

적 차원에서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소국가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적지 않은 중소국가들은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참에 정치·외교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안보중심의 미·일·호·인 쿼드협력(Quad 2)을 중국 견제를 위한 기제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미·일·호·인 쿼드 협력(Quad 2)이 아세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려하고 있다.<sup>83)</sup>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면서도 아세안 등 중소국가들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7월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지경학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미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PSR)’(2019.1.)에서는 안보, 경제, 거버넌스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또, 미국 국무부는 중국 견제의 뉘앙스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보다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Indo-Pacific Initiative)’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도전 견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지경학적 구상물이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지경학적 구성의 특성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경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과 중국 일대일로의 유사점,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통점 모색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83) 배궁찬, 『QUAD의 대두와 ASEAN의 대응』 (서울: 국립외교원, 2018), pp. 26~27.

## 다. 인도의 부상과 스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중요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며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하며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계하는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전략공간의 확대는 인도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하며 유사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도 중국의 공세적인 해상정책과 팽창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일대일로를 경계하며,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의 전향적 참여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품과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 진영의 지지 강요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인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선택의 딜레마’에 의해 초래되는 외교안보적 제약을 최소화하며 대외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네시아, 아세안, 호주는 물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적지 않은 국가들도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을 의식하여 상당한 정치·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등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대중국 봉쇄전략의 동참에는 신중하거나 비판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중국을 의식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정치외교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

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수정하였고,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부상, 스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중요성, 일본의 스윙 스테이트 중시 전략외교 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 라. 한-아세안의 '미들 파워' 아이덴티티 협력 관계 및 아세안 중심성 인정

아세안은 경제성장과 함께 단합된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를 바탕으로 역내 안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질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현상변경에 규범 준수를 내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아세안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게임에 '미들 파워'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견제 내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도한 개입 혹은 역외 지역으로의 철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이 동 지역의 안보 현안 문제 해결에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세안은 중견국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경제통상, 한반도 문제, 비전통안보, 지역 다자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신남방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전통적인 일본의 대아세안 외교를 생각했을 때 물량으로는 중국, 일본과 경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한국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미들 파워 아이덴티티 협력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sup>84)</sup>

아세안 지역의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향상 및 기술, 방산 등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편 어떠한 정책이든지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반발 혹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아세안 안보정책도 아세안 지역에 대해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확인 받으려고만 한다면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고, 아세안 지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마. 인간 안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사람(people) 중시의 협력**

신남방정책에 따른 문제인 정부의 대아세안 안보정책은 철저하게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혹은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군사협력 분야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사람’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다. 인간안보는 단순한 안보협력만이 아닌 ODA를 비롯한 경제외교 및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종합적으로 연동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에서는 사람과 문화의 교류 확대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및 인도 내에서 영향력 있고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

84)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파주: Book Star, 2018), pp. 296~297.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위원회는 신남방지역 장학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sup>85)</sup>

또한 신남방지역의 한류확산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지역에 한국문화원 등을 추가 신설하고,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교기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하고, 한류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해서 한류 열풍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KOICA 등 정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대아세안 인간안보 및 인적 교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 바. 아세안, 인도 지원을 위한 한중일 삼국 간 협의 및 연대 고려

신남방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종의 ‘코퍼티션(coopetition)’이다. 즉, ‘협력’과 ‘경쟁’이 함께 가는 구조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전략에서 한국보다 역사도 길고 가치사슬 구축 노력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 입장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일본이 신남방 지역에 형성한 촘촘한 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신남방정책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강대국들의 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에서 선택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신남방 지역이 중요하고, 각 국가와의 프로젝트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세안

8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2019.4.30.), pp. 4~5.

지역을 둘러싸고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일대일로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관해서 아세안 각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협력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협력해서 대아세안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역시 비전통안보 혹은 인간안보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sup>86)</sup>

또한 ‘(가칭) 한·중·일 대아세안 안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장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중복성’ 문제이다. 한중일이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발견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이 가능해지는 반면, 서로 아세안에 대한 경쟁적이고 ‘제로섬(zero sum)적인 협력의 중복 및 상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화구축을 위한 미얀마의 소수민족문제, 즉 로힝야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지난 2017년에 13억 달러 지원이 결정되었다. 대부분의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활동 영역은 이미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선점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 대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86)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인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2018년 말)에 따르면 중국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19.6%였지만, 일본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65.9%에 달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은 51.5%, 일본에 대한 불신은 17%에 불과했다. 물론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45.2%로 나왔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29 January 2019, <<https://www.iseas.edu.sg>> (검색일: 2019.11.11).

## 2. 추진방안

### 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 및 공통부분을 모색·확대하는 전략적 지혜로 추진

중국에 이어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요 전략공간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 역동성으로 새로운 세계성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단순히 인도 및 아세안 지역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여 미중 강대국 정치의 동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향,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의 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및 후유증,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역내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파악은 물론,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립 상황에서 상당한 정치외교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고, 아울러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전략적 교훈을 얻으며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

서(IPSR)'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처럼, 미국이 '한미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해온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일본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하는 지정학적 구상물이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구성의 특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①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 및 공통점 확대 ② 신남방정책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 및 공통점 확대 등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③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략적 지혜를 참조하여 신남방정책을 포용적 전략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기본원칙<sup>87)</sup>으로 하는 만큼, 한국은 제로 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전략적 지혜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87) 외교부,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외교부 보도자료, 2018.8.14.).

## 나.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의 추진·강화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전략적 활용

현재 한국 정부는 미·일·중·러 기존의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지평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형성을 핵심비전으로 제시하며 외교공간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남방정책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정치·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된 공간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독자적인 힘(power)의 투사에 한계가 있고, 인도, 아세안 등 주요 스윙 스테이트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이 인도,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다. 즉, 한국은 대아세안 및 대인도 전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를 경계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력국가들을 아세안+3, EAS, ARF 등에 참여시키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된 미국의 힘을 보완하며, 미중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sup>88)</sup> 2019년 1월, 아세안은 미중 간 균형에 역점을

88)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31.

둔 '아세안 중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정치와 배타적 성격의 국제질서를 경계하고 '포용적 지역질서(inclusive regional order)' 형성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유사하다.<sup>89)</sup>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흥 강국인 인도 역시 주요한 스윙 스테이트이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일·호·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도는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인도 국경분쟁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인도 합동군사훈련 및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고 있다. 인도는 2014년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 등 친서방 외교정책을 강화하면서도, 2017년 6월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요컨대, 인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동참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추구하기보다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헤징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일·인 3국 정상외교뿐 아니라 중·러·인 3국 정상외교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선택의 딜레마'에 의해 초래되는 외교안보적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inclusiveness)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이다. 신남방정책도 포용성에 기초한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89)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9.8.14.) 발제문.

그러므로 한국은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를 강화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미중 전략적 경쟁과 관련, 한국과 스윙 스테이트의 유사한 이해관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대립구도에서 파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스윙 스테이트의 유사한 이해관계는 신남방정책이 미중 대립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대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적 활용이 유효할 수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강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K-Pop,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거부감이 약하며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가 열세인 상황에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와 신남방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소프트 파워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최대한 활용하여 하드파워의 열세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sup>90)</sup>

인도·태평양의 시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와의 관계 강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뿐 아니라, 외교 협상력(bargaining power) 증강으로 귀결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력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인도 및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와의 관계 강화는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협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9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54~355.

## 다. 안보 차원에서 비전통 안보협력의 확대 및 강화

1990년대 냉전 종결 이후 세계 안보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 마약, 이민, 테러리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안보 어젠다의 확산 경향이 안보론의 틀 내에서 논해지고 있다.

9.11 테러에 의해 국제 테러 조직의 위협이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는 이러한 국제 테러 위협 외에도 최근 안보 문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인간안보로 대표되는 위협에 대해, 인구 폭발, 경제적 불평등, 인구 이동(난민 유출), 환경 악화, 약물 등을 주요한 위협으로 상정하고,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지역사회, 정치 등 7개 분야별 안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은 인식 레벨에서 전통적인 위협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전부터 위협의 근원이나 위협성의 존재는 인식되고 있었지만,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위협 근원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정의 변화, 군사 기술의 새로운 발전 등에 의해 위협 성질이 이른바 ‘갱신’된 것이다. 둘째, 이전에는 위협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인식이 약했지만, 냉전 종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의 특징으로는 전통적 위협과 달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위협이 직접 연결되어지기 어렵고,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남아 및 인도 지역은 태풍, 지진, 해일 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며,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아세안

지역, 특히 해안지역은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태풍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 공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공동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신속하고 면밀한 조정 능력이 필요하며, 평상시부터 정책협이나 공동훈련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현지의 지리와 문화 등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재해에 대한 개별 국가와의 역할, 임무, 능력의 명확화, 방재훈련에 대한 한국군 참가를 통한 공동요강의 구체화, 정보공유와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확보 등의 과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인류 역사는 다양한 감염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원인도 치료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감염에 의한 전염병은 역사를 바꿀만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 이후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1970년대부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인 ‘신홍 감염’이나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한때 발생 수가 감소했지만 다시 출현한 감염인 ‘재홍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 문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위협이다.

안보 위협 차원에서 보면 구소련의 생물무기생산조직 최고책임자였던 케니스 알리벡(Kenneth Alibek)은 그의 저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말했다.<sup>91)</sup> 비밀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1980년에 근절 선언된 천연두도 안보 위협이다.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생물무기금지조약이 있지만, 안보 위협으로서의 실패는 어떤가?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한국의 ‘2012 국방 백서’

91) 케닌·아리벡(著); 山本 光伸(訳), 『バイオハザード』(東京: 二見書房, 1999).

에서는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출혈열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 테러의 관점,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전염병 혹은 감염 문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의료 종사자도 감염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종사자를 외국에 파견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러한 의료팀을 파견한다고 하면 당연히 확고한 지원 태세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한국군이 담당해야 한다. 한국군은 유엔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과 국제 긴급 원조 활동에서 구호소를 개설·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후방 지원 체제가 충실히 갖춰져 있었다. 구호소·치료 시설 등의 개설·운영, 의료 종사자에 대한 관리 지원, 소요 인원·물자 수송, 방역 소독 작업 등이 현재 한국군이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을 전염병 발생 지역에 파견하려면 사전에 세심한 준비 및 기자재 준비와 훈련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군 파견이 장기화되면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세안의 전염병 지역에 재해 파견 시, 국내의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간 협력과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협력에 따른 긴급 수송, 방호 조치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 소독, 의료 활동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방호 조치가 가능한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 방호의 및 탐지 장비 등 장비 구축, 환자 이송, 치료 시설 및 의료 제공, 예방약·치료제의 수송·배포, 확대

방지, 제염 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내 대응 태세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필요 충분한 협의에 따른 대응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한국은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테러 대책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아세안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가칭)국제 테러리즘 협력에 관한 한국-아세안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테러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협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한국-아세안 통합 기금' 창설을 테러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대테러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한국-아세안 테러 대화'를 창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수사 활동 통신 시스템, 감식 활동용 기자재 제공, 테러 대책 세미나 실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해적 행위는 해상에서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증대한 위협이다. 특히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인 원유 등 자원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해역, 동남아의 말라카 해역에서는 인질 여류에 의한 몸값을 목적으로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무장한 해적 활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16호를 비롯한 여러 결의에서 각국은 아덴만, 말라카 등에서 해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 특히 군함 및 군용기 파견을 요청받고 있다. 말라카 해역에서 해적 활동의 발생 건수는 최근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빈곤 문제 등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해양법,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

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관계국과 협력해서 해적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아세안 연안국 자신들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고, 동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서 공동훈련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과 국방당국 간 IT 포럼을 실시함과 동시에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에스토니아 등과도 국방당국 간에 의한 사이버 협의를 설치하고, 위협 인식과 각각의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상 일부 지역이나 국가의 대처능력 부족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 세계 전체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아세안의 역량강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가칭)사이버 안보 분야의 대아세안 능력구축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략적이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사이버 안보 대응은 양자 중심과 다자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각국에 진출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세안 국가들의 취약한 사이버안보 환경이 한국에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아세안 사이버 분야 능력구축지원은 사이버 안보 의식계발 및 중요 인프라 방호, 사이버 범죄 대책,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및 법집행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조약 체결국회의와 같은 다자외교에서는 사이버범죄대책지원을 통해 사이버 공격 등의 범죄에 대한 대처·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마련 및 신뢰양성조치에 관한 아세안의 이해와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라. 해상교통로(sea lane)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구축지원<sup>92)</sup> 확대

최근 중국 해군에 의한 인도네시아 근해에 대한 조사선 파견이 잇따르고 있다. 미군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해서 인도양에 잠수함을 전개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조사선을 9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척이 2015년 이후에 취역하였다. 조사선은 수심과 해저지형, 조류 이외에도 잠수함이 발생시키는 음파에 영향을 주는 수온 등을 조사한다.

중국의 해양 조사는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동쪽에서 자바섬 동쪽 해역의 롱보크 해협, 남중국해에서 자바 섬 서쪽 해역의 스타 해협을 경유하는 2가지 루트가 있으며 현재 미국과 인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감시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에 잠수함을 파견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잠수함의 항행 루트 확립을 위해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은 해상교

92)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은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안보 관련 분야에서 인재육성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국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 안보 분야(인도지원, 재해구조, 지뢰 제거, 군사의학, 해양안보, UN평화유지활동 등)에서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국가의 군 및 군관계기관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로의 요충이며, 중국의 원유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무역상선의 통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무역상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사선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에게 해상교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상교통로의 주요 사용국으로서 남중국해에서 높아지고 있는 각종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해양법 집행 능력이 취약한 단점을 한국이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퇴역한 함정(해군)과 경비정(해양경찰)을 베트남과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경찰 혹은 해상경비대 간의 훈련 및 교류 활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과 아세안 간의 군사 공조 강화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로 해석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행동 계획에는 해적 대처에 관한 협력과 해상 공동훈련 실시 등 해양 안보 협력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능력구축지원은 일본이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국제공헌’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일본과 안보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숨겨져 있다.

한국이 아세안 지역에서 능력구축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은 결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히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구축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능력구축지원은 결코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해적 대응 능력 강화와 해상구조 능력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아세안 간에 군사적 공동훈련, 인재육성, 항행의 안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해상보안 및 안전능력구축을 위해 인재육성 계획을 추진한다. 그 동안 한국은 경비정 공여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상 안전에 기여하였지만, 향후 해상보안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양 분야의 잠수의학과 기상해양업무, 해도 제작 등에 관련된 인재 육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한국군만의 능력구축지원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ODA와 능력구축지원을 결합한 형태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경찰 능력 강화를 위해 경비정의 ODA 공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ODA와 같은 하드 협력과 함께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소프트 협력을 조합시켜 끊임없는 원조를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는 ODA, 한국군에 의한 능력구축, 군수장비 협력 등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메뉴를 통합해서, 아세안 국가들

이 해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외교적,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능력구축지원 차원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살려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역량강화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는 효과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설명할 수 있고,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의 ‘숨구멍’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sup>93)</sup>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국제적 지지를 아세안 및 인도를 중심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향한 한국과 아세안의 공조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장소 제공을 담당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춘 중요한 기여를 하였

93) 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통일한국』, 제416호 (2018년 8월호), p. 14.

다. 특히 오래전부터 북한과 수교상태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향후 북한의 경제적 대외개방, 지역외교 무대 데뷔,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아세안은 북한이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sup>94)</sup> 인도는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국가이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역전략 개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와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sup>95)</sup>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방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성과를 북방 지역으로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한반도 역할과 함께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변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한반도는 북방 지역에서 남방 지역으로 에너지 및 전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남방 지역에서 북방 지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는 물류 흐름은 아시아 전체에도 변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하다.<sup>96)</sup>

## 바. 평화구축 및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구축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통해 지역의 전략적 환경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 즉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

94) 최원기, “신남방정책, 새로운 대아세안 외교전략,” 최원기 외 엮음,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한다』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2019), pp. 428~429.

95)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p. 13.

96)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pp. 14~15.

화 및 평화체제, 아세안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에게 안보 문제, 그 중에서도 인도지원, 재해구조 및 해양안보와 같은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안보 협력의 지침(Guideline)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한국-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가칭, 이하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먼저 아세안 지역의 안보 과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세안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협력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전체의 안보협력의 방향성과 안보협력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중점분야의 전체상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개별 국가에 더해서 아세안 전체의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구상한다. 여기에는 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유지, 해양안보 강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안보 과제 대응이라는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에게 국제법 및 규칙에 대한 인식 공유 촉진, 능력구축지원, 방위산업 교류협력, 공동훈련, 인재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천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한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현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초청할 적기이다.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높아질 때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 말려드는 상황을 경계한다. 한반도 긴장이 낮아질 때, 아세안은 남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게 개혁개방에 관한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세안 국가들

이다.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특히 아세안 비핵지대 건설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 혹은 비핵지대 실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세안 역내 동티모르, 필리핀(만다나오), 인도네시아(아체), 미얀마 등에서 지역 분쟁이 발생하였다. 현재도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화구축 및 화해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아세안 평화·화해기구(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IPR)’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에서도 ‘평화, 분쟁 관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활동의 연구강화’가 아세안의 행동목표 중 하나로 명기되었고,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AIPR의 활용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아세안 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먼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과의 국내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민생 현안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 및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통한 평화구축 및 국민화해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의 대화 혹은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다. 그리고 AIPR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AIPR이 주최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워크숍,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의 개최비용을 부담하거나 한국 측 인사의 참가를 독려할 수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8월 2일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국은 신남방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양자, 다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향후 아세안과 인도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규범 및 가치사슬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세안,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표명하였다.

### **사. 대아세안, 인도 경제 협력 차원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7일 아시아 지역 언론연합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로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방위산업(방산) 등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sup>97)</sup>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아세안과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부문에서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향후 한국

---

97)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2019.3.7.

이 주도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면 미국과 EU 방위산업체처럼 공동개발 및 생산, 합작투자,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연관해서 정부와 해군 차원에서의 지원 등 아세안 해군력 현대화 시장에 진출하고, 아세안 개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아세안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아세안이 희망하는 해군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sup>98)</sup>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방산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 대표적인 것이 아세안 국가들의 노후한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해군 및 해양경찰의 전력 증강에 매우 중요하다.<sup>99)</sup>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를 갖고 있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 조선업과 방산협력을 추진 중이다. 인도 역시 조선업, 특히 군함을 비롯한 각종 선박 건조 기술 이전과 직접투자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sup>100)</sup>

하지만 아세안 및 인도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할 때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기술이 상대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산 협력 과정에서 기술 보안 레벨을 엄격히 관리하는 체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

98) 김종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2016.3.10. <https://www.kims.or.kr/peri32/> (검색일: 2019.11.11.).

99) 김종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100)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아시안 뉴스 네트워크』 2019.8.9., p. 4.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8.
- 국방부. 『2018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ステーツ.” 日本國際問題研究所.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Seco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5.
- 배궁찬. 『QUAD의 대응과 ASEAN의 대응』. 서울: 국립외교원, 2018.
- 배정호 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 배정호·박영호·여인곤·전병근·이춘근.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서울: 형설출판사, 2015.
-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파주: Book Star, 2018.
-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울: 책들의 정원, 2019.
- 현승수·배정호·정구연·정성철·김애경.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Abe, Shinjo. “Asia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Websi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 재인용: 鈴木美勝. 『日本の戦略外交』. 東京: 筑摩書房, 2017.
- ケン・アリベック(著); 山本 光伸(訳). 『バイオハザード』. 東京: 二見書房, 1999.
- 外務省. 『外交青書2017』. 東京: 日経印刷, 2017.
- \_\_\_\_\_. 『外交青書2018』. 東京: 日経印刷, 2018.

\_\_\_\_\_. 『2017年版 開發協力白書, 日本の國際協力』. 東京: 日経印刷, 2018.

## 2. 논문

-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유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도전과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 『외교』. 제129호. 2019.
- 윤석준.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 한국해로연구회 편.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오름, 2019.
-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통일한국』. 제416호(8월호). 2018.
- 정구현·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 방안.”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겨울호), 2018.
- 정구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결정 요인 연구: 민주주의 효과성의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집 2호, 2019.
- 최원기. “신남방정책, 새로운 대아세안 외교전략.” 최원기 외 엮음.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서울: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2019.
- 황재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Kamiya, Mataka. “‘Cooperative Strategy’ to Realize ‘Competitive Strategy’: The composite structure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Vision).” Security Studies. vol. 101, no. 2(April), 2019.

江原規由. “一帶一路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 673, 2018.  
津上俊哉·森聡. “強硬路線は変わるか·米中「ビック·ディールの可能性.”  
『外交』. vol. 54. Mar./Apr., 2019.

### 3. 기타자료

『뉴스1』.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안 뉴스 네트워크』.  
『중앙일보』.  
『日本經濟新聞』.  
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통일한국』.  
제416호(8월호), 2018.  
김경숙.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프』.  
147호, 2019.9.18.  
김중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2016.3.10.  
김형중.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2019.5.16.  
백우열.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자료. 2018.11.1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9.4.30.  
외교부 보도자료.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전략간 점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2018.8.14.  
이기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한계.”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비공  
개 자료. 2019.5.10.  
조양현.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외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서울: 국립외교원, 2018.1.16.  
최경희. “신남방정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세안 공동체.” 토론회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2019.5.16.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자료(2019.8.14.).  
\_\_\_\_\_.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 2019-13K, 2019.8.9.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19.11.11.).  
The Department of State.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검색일: 2019.11.1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색일: 2019.11.1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s://nsp.go.kr>>.

싱가포르 국립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29 January 2019. <<https://www.iseas.edu.sg>>.

首相官邸. “第百九十八回国会における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https://www.kantei.go.jp>> (검색일: 2019.11.11.).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삼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통합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	---	-------------------------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2018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욱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감삼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삼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자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 Study Series ■

-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전더정치 조장아 외 11,000원
-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외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 Study Series ■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 기 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영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함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